

내년 1월 백두대간보호법 시행... 불교계 득실 뭇까

사찰환경 좋아질듯

백두대간 지역 사찰의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을 보호할 강력한 수단이 생긴다.

백두산에서 시작해, 설악산·오대산·지리산으로 이어지는 총 1400km에 달하는 백두대간 지역을 각종 개발 행위로부터 지키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보호법)'이 2005년 1월 발효된다. 이에 앞서 7월부터는 산림청과 해당 시·도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지도상에 표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8월부터 강원권, 충청·경북권, 전라·경남권으로 나눠 현지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실시된다. 이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에서는 앞으로 골프장 스키장 등 위락시설은 물론 댐 도로 송전탑 건설 등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해진다.

건축 행위 제한... 불사시 신중해야

불교계 의사 반영할 창구 마련 시급

2003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백두대간보호법'은 능선을 기준으로 해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것. 보호구역 지정에는 동식물 생태계의 상태, 산악 지형의 표고와 경사도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면 사찰 주변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구역 내의 건축 등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보호구역 안에서는 핵심구역 내 '전통사찰과 문화재의 복원·보수·이전 및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설치(제7조 1항)'와 완충지역 내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종교시설의 증축 및 개축(제7조 2항)' 등을 제외하고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그 외에도 이 법은 백두대간 보호 활동을 지원한다. '백두대간보호법'은 백두대간 보호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이에 따라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미뤄졌던 훼손된 사찰 주변 환경에 대한 복원과 조사, 연구 작업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도 있다. 법률 위반 시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불사를 할 경우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는 전통사찰들을 제외한 일반사찰들은 앞으로 불사 추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불교계 의사가 백두대간 보호 정책 등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는 백두대간 지역에 174개 사찰과 2,250만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 이해당사자인 불교계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할 '백두대간보호위원회'에서 배제돼 있어, 사찰 현안 사업을 추진할 길이 완전히 막힐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 등의 수립단계에서 불교계 의사를 반영할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불교계의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 차원에서 '백두대간 보호법'에 대한 법령 개선 작업을 벌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불교계의 입장을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관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17대 국회 정각회 출범

인터뷰 이용희 회장



▲소감은? -무거은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16대 때 회장 선출 문제를 놓고 정각회가 결성되지 못했다. 이제 선두에 서서 정각회를 이끌어 가겠다. 국민과 불자들의 심부름을 하는데 인색하지 않겠다.

▲정각회 운영방침은? -회원 확보가 시급하다. 국회의원불교신도회가 조사한 현황을 보니, 299명 재직의원 중에 불자는 불과 40명이었다. 현재까지 가입의사를 밝힌 의원은 43명이다. 앞으로 무종교 의원들과 자주 만나 정각회 입회를 적극 권유하겠다. 17대 국회의 화두는 '상생'이다. 이 정신의 바탕은 불교에 있다. 정각회원들이 상생정치를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돕겠다.

회원 늘리고 양보할 줄 아는 의원상 만들어

▲불교 관련 입법 활동을 어떻게 펼칠지 궁금하다. -먼저 종단 및 관련 단체로부터 불교 관련 현안과 여론을 수렴, 상임위원회별로 활동 중인 정각회원들이 불교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새롭게 정각회가 출범한 만큼 뜻을 모아 현안들을 풀어가겠다.

▲불교계가 정각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모범이 되고, 양보할 줄 아는 의원상을 우리 정각회원들이 만들어야겠다. 불자의원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불교계의 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겠다.

김철우 기자

풀어야 할 과제

우선 전통사찰보존법(이하 전사법) 개정이 시급히 추진할 안건으로 대기하고 있다. 전통사찰의 신·증축 시 '문광부장관의 허가' 적용 범위를 놓고, 도시공원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과 상충되는 법조항이 개선돼야 할 핵심.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사찰의 건축물 신·증축에 대한 포괄적 우선 규정을 전사법에 뒤야 한다는 게 불교계의 입장이다. 이밖에 일반사찰의 농지 소유를 금지한 농지법의 개정, 공익용산지에 전통사찰 신축 불허한 산지관리법 개정 등 관련 국가법령이 많다.

이 같은 불교관계법의 개정은 '수행환경'과 '종교활동' 보장에 초점을 두고, 불교의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또 '행정의 간소화'도 정각회가 지향

해야 할 개정방향이다. 정각회는 불교 종단과 국회를 잇는 유기적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5대 경우, 정각회가 불교계의 숙원사업인 불교관련 악법들의 개정 필요성을 집중 부각시키고, 의원입법발의를 통해 불자 국회의원들의 역량을 발휘했다.

그러나 이번 17대 국회는 불교관련법 개정을 주도했던 핵심 불자의원이 국회에 입성하지 못함에 따라, 정각회는 불교관련 현안을 서둘러 파악해야 한다. 실제로 17대 정각회원 40명 중 초선의원이 75%(30명)이나 되는 반면, 재선은 7명, 3선 2명, 4선은 1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17대 국회 정각회는 불교 종단 및 관련 단체로부터 불교관계법 개정의 내용을 다양하게 청취, 입법활동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또 불교관계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내 활발한 입법논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성보박물관협회' 결성된다

추진위원장에 해운 스님

성보박물관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내는 중심점이 될 '가칭'성보박물관협회'가 결성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성정) 주최로 7월 7일부터 9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2004년 제1차 성보박물관 실무교류 및 간담회'에 참석한 16개 성보박물관의 실무자 21명은 성보박물관협회 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으로 해운 스님(월정사 성보박물관 실장)을 선출했다.

준비위원회는 협회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좁혀 수립하고, 향후 협회 결성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박익순 기자

광주지하철에도 포교계시판 설치

풍경소리 포교계시판이 광주 광역시 지하철 승강장에도 설치됐다. 이로써 경부선, 호남선 등 철도청 운영 구간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모든 지하철 역사에서 풍경소리 포교계시판을 만날 수 있게 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대표이사 해자)는 지난 6월 10일 광주도시철도공사로부터 포교계시판 설치를 승인받아 1호선 구간 13개역사에 26개 게시판 설치를 6월30일 완료했다.

풍경소리는 광주 지하철에도 포교계시판이 설치됨에 따라 광주·전라 지역을 아우르는 풍경소리 포교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템플스테이 여행상품으로 템플스테이 사업단(단장 일관)이 국내 관광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7월 2-6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1회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 불교문화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은경 기자

남북종교인 계속 만나자

스리랑카 킬롬보에서 열린 ACRP(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집행위원 회의에 참석한 남북한 종교인들이 6월 29, 30일 따로 만남의 자리

를 갖고, "남북 공동 관심사인 평화 통일을 위해 종교인들의 힘을 모으자"고 결의했다. 이 행사에는 KCRP 집행위원 진철 스님, LA 관사 주지 도안 스님, 북한종교인협회 장재은 회장이 참석했다. 강유신 기자

종교자유 1인시위 고교생 제적

인권위에 진정키로

"종교의 자유를 달라"며 서울시교 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던 강석(18)군이 개신교재단인 대광고로부터 제적당했다.

강 군은 7월 8일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던 중 불러나가 "오늘부로 제적됐다. 자세한 내용은 우편으로 발송될 것이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강 군은 13일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

이에 대광고측은 "강 군에게 전화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부해 교칙에 따라 제적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군은 다음 카페 종교사랑(cafe.daum.net/whdrytkfkd)을 통해 "제적당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생

각해 봐야한다"는 주위의 말씀에도 학교가 최종적으로는 올바른 선택을 내려줄 것으로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해인사 불사검토회의에 환경·신행단체 참여 요청

합천 해인사(주지 세민)는 7월 8일, 불교 환경·신행단체들이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대신해, 이들 단체에 7월 17일 열리는 '해인총림 불사검토회의'에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16개 단체들은 대표 3인을 협의회에 참석시키기로 했다.

불교 환경·신행단체들은 6월 29일 해인사로 내원암과 신행문화도량 불사와 관련한 23개항의 질의서를 보냈다. 강유신 기자

성명서(안)

우리는 이 명박 서울시장의 "대한민국 수도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종교 편향적 발언과 공인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종교를 빙자한 국민 분열적 작태를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 이명박 서울시장 공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종교인만의 시장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타종교인과 비종교인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에게 즉각 공개 참회하라.

- 서울은 서울시민의 것이며, 이 나라 전체국민의 수도로 이 명박 개인의 소유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서울을 특정종교에 헌납하는 행위를 한 것은 엄청난 직권남용이며 상식을 무시한 처사로 이러한 기본적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이에게 더 이상 수도서울의 대표직을 한시라도 맡길 수 없기에 이명박 시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이 같은 행동은 현재 우리나라가 다종교사회임을 부정하고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고 상호 화합하려는 종교계의 상생의 움직임에 찬물을 끼어 엷는 반 종교인적인 행동이며, 특히 수도서울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인의 신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종교편향적인 작태로 공인의 신분을 망각한 행동이었기에 우리 200만 부산불자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소속한 공개참회와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200만 부산불자들과 함께 일치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불기2548년 7월 8일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